



주간통일정세 2011-37(2011.09.05 ~ 09.1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3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남북관계 출로는 공동선언 존중·이행"(9/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북남관계 개선의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신문은 '출로는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지금이야말로 남조선 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의사를 공식 밝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촉구
 - 신문은 또 남한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대화와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북남관계는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 때문에 파국에 처한 것이 아니다. 북남관계 파국의 원인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에 있다"고 주장
 - 한편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및평화연구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이 위협천만한 '흡수통일' 망상에서 깨어나도록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담화는 또 "우리가 주장하는 연방제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는 달라도 공존, 공영하자는 통일방식"이라며 "흡수통일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고 연방제통일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주장

- **北총리 "북남관계 발전의 새 국면 열 것"(9/8,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는 8일 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북남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앞당겨 오고야 말 것"이라고 말함.
 - 최 총리는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최 총리는 이어 "김정일 동지께서 올해 5월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동(華東)지역에 대한 방문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오가며 조중(朝中, 북중), 조러(북러) 친선의 연대기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했다"고 칭송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는 또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해야 한다"며 "군대를 강화하고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함.
- 이날 행사의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문경덕·김평해·태종수·김영일·김양건·최태복 당비서, 로두철·한광복·강석주·조병주·강능수 내각 부총리,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 국장, 리병철 공군사령부 사령관, 백세봉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 김정일父子, 평양건설현장 등 4곳 현지지도(9/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수대지구건설장 등 평양시 4곳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만수대지구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수도 건설자들과 인민군인들의 드높은 정치·사상적 열의와 노력적 투쟁에 의해 지금 만수대지구에는 기존의 도시 건설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식의 새로운 거리가 시대적 미감에 맞게 건설되고 있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평양 소재 8월 풀가공공장도 돌아보면서 "공장이 새롭게 개건(리모델링), 현대화된 결과 지난 시기 쓴 맛과 떫은 맛을 내던 8월 풀당이 이제는 사탕의 고유한 맛을 내게 됐다"며 "식료공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치하
- 김 위원장은 또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밀짚직장도 방문해 "새로운 밀짚 생산공정을 꾸려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이동식 밀짚봉사 매대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면 수도시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함.
- 새로 건설된 보통문거리 고기상점도 찾아간 김 위원장은 "수도시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서 보통문거리 고기상점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품 진열은 상업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이므로 상품진열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의 건설현장 등에 대한 현지 지도에는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태종수·문경덕 당비서, 박봉주 당 경공업



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일·정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9/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 창건 63주년을 맞아 9일 오전 0시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정권창건일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하기는 1998년 이후 13년 만으로 이는 특히 김정일·정은 부자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보도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일 이후 두 번째로 정권 창건기념일을 맞아 이곳을 참배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강조하고 3대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룡해 당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경옥·김명국·김원홍·정명도·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최상려·최경성, 국방위원회 국장인 현철해 등이 함께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北정권 창건 63주년 열병식...김정일·정은 참석(9/9, 조선중앙TV)**
 - 북한은 9일 오전 정권 창건 63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적위대 열병식을 개최
 - 조선중앙TV로 생중계된 이날 열병식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주석단(귀빈석)에서 지켜봄.
 - 북한이 노동당 창당일, 정권 창건일 등의 정주년(매 5, 10주년) 기념일에 열병식을 하는 사례는 있지만 정주년이 아닌 기념일에 열병식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임.
- **北정권 창건 63주년 기념연회 열어(9/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9일 정권 창건 63주년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연회에는 노동당과 국가의 간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인민군 장병, 비전향 장기수 등이 참석했고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 사절단, 무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초청됐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한편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8일 일본 도쿄의 조선회관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로 정권 창건 63주년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렸다고



10일 전함.

● **김정일·정은, 목란비디오사 현지지도(9/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평양 소재 목란비디오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목란비디오사 간부들로부터 새로 건설된 DVD공장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최첨단 설비의 생산공정 등을 돌아보고 문화매체의 생산과 보급의 정형을 요해(了解.실태 파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는 김기남·박도춘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평양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9/8, 중통)
 - '평양 8월 풀가공공장'과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밀쌈직장', '만수대지구 건설장', '보통문거리 고기상점' 현지지도
 - 김정은, 김기남, 김경희, 장성택, 태종수, 문경덕, 박봉주, 한광상 동행
- 김정일, 9.9 0시 금수산기념궁전 찾아 김일성에게 경의 표시(9/8, 중통)
 - 김정은, 이영호, 김영춘,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최용해, 우동춘, 이명수, 김경옥, 김명국, 김원홍, 정명도, 이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상려, 최경성, 현철해, 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들, 군 지위성원들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정권 창건(1948.9.9) 63주년 관련 動向】
 - 駐北 외교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 9.6 원산청년발전소 · 고산과 수농장 참관(9/6, 중통)
 - '양육출'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9.6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의 정권 창건 업적' 선전(9/6, 중통)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8.30) 제1852호 발표, 모범적 단위들에 '2중 26호모범기대영예상'(김책공업종합대학 공업경영학 등), '26호모범기대영예상'(검덕광업연합기업소 2선광직장 등) 수여(9/6, 중통)
- 北, 9.8 '공화국 창건' 6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9/8,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보고), 이영호 등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등과 재일본조선인축하단, 해외동포대표단,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참가

나. 경제

- "美NGO 10일까지 대북수해 지원품 분배감시"(9/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지난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북한에서 의약품, 위생용품, 정수기 등의 구호물자가 수재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사마리탄스 퍼스'를 비롯한 미국의 5개 민간구호단체 관계자 6명은 지난 2일 평양에 도착해 미국에서 보낸 화물기를 접수하고 강원도와 황해도에서 분배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홍수 피해현황도 점검할 계획
- "北 WMD수출·수입 잇따라 차단"(9/5, 연합뉴스; 위키리크스)
 -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비밀외교 전문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미국은 북한의 WMD 관련 활동을 저지하고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숨가쁜 행보를 보였는데, 그 중 북한이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무기류를 수출하려다 차단된 경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 국무부는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국가 대사관에 2009년 1월15일 보낸 전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 대표단이 사하라 주변지역을 여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와 관련 북한 대표단의 도착 시기가 북한 선적 화물선 비로봉호가 이 지역에 도착하는 시기와 맞물렸다면서, 이는 화물선에 무기류가 실린 때문으로 추정하고, 이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요구하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 중단을 관련국들에 경고토록 자국대사관에 지시



- 이 밖에 4월29일 주중미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전자장비를 남포항에서 2월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고, 현재 Ningbo항에서 시리아로 보내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중국측에 제공하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와 수출 저지를 요구
 - 2008년 10월7일 스위스주재 미대사관에 보내진 국무부 전문은 북한이 바세나르체제와 핵공급국그룹이 통제하는 민감한 장비를 스위스 회사를 통해 구매하려 한다는 정보가 담겨있었으며, 북한이 중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 스위스의 샤푸블린이라는 회사에서 선박기계류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스위스 당국의 적극적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미 국무부는 2007년 8월29일 요르단주재 자국 대사관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북한이 요르단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랍뱅크를 통해 이란, 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런 정보를 요르단 측에 주면서 주의하도록 당부
- **"北주민 하루 식량배급 여전히 200g 불과"(9/6,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성인 주민 한명에게 하루 2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6일 보도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최근 몇 달간 북한의 공공배급은 수입 곡물로 유지됐다"고 전함.
 - WFP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하루 배급량은 지난 4월 400g에서 5월 190g, 6월 150g으로 계속 줄었다가 7월과 8월에는 200g으로 약간 늘었음.
 - **"김정일, 나선특구는 3대산업으로 부흥시켜야"(9/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9년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조업, 물류 및 교통, 관광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라선시 인민위원회 황철남 부위원장(부시장격)은 최근 나선 경제 경제특구 및 금강산 시범관광에 나선 외신기자들에게 "우리의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나선시를 방문했을 당시 우리에게 '3가지 핵심산업을 통해 나선 경제특구의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나선 경제특구 당국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제조업, 물류 및 교통,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황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 황 부위원장은 "(나선 경제특구의 경우) 현재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많은 중국의 섬유 기업들, 심지어 대만의 섬유기업들도 나선지역에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 "지난달 러시아 곡물 1만8천t 北에 전달"(9/7,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8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곡물 1만8천t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전함.
 - 러시아는 지난달 밀 1만1천200t과 밀가루 6천600t을 북한으로 보냈고 이 곡물은 북한의 12개 식품 가공공장에 분배됐다고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이 밝힘.

- 北, 中창춘서 라선특구 투자유치 설명회(9/7, 연합뉴스)
 -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황철남 부위원장이 7일 중국 창춘(長春)에서 라선특구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황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7회 지린(吉林)·동북아경제무역박람회의 '조선(북한)의 날 및 중·조무역투자항목상담회' 행사에서 "라선은 중국, 러시아와 접해 있고 유럽이나 북미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천혜의 부동산향을 확보하고 있어 국제 무역의 최적지대"라고 밝힘.
 - 그는 중국 훈춘(琿春)-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가 오는 11월 완공되고 러시아 하산에서 두만강을 거쳐 라진항에 이르는 광궤 철도 보수공사도 오는 10월 마무리되며 라진과 중국의 연길(延吉)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 개설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라선특구 용수 해결을 위해 2천200만㎡를 저장할 수 있는 수원지를 확보했으며 이곳에 2천100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도 건설, 전력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임.
 - 또 태국 기업이 2천688만 유로를 투자, 국제전화가 가능한 유·무선 통신망을 갖췄고 수심이 깊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라진과 선봉, 웅상항 등 3개 부동산향이 있으며 경관이 빼어난 20여 개의 섬이 있어 국제적 관광지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함.
 - 황 부위원장은 50여 개의 법령을 정비, 라선 투자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투자 원금은 물론 이윤을 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각종 세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 "北나선특구 근로자 최저임금 80달러"(9/8,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공동개발 중인 나선 경제특구에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으로 80달러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소식통은 8일 "최근 입수한 '나선경제무역지대 세금정책' 책자는 '기업경영기간 종업원의 월 노임 최저기준은 80달러'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자는 나선시세무국이 7~8월 외국인 등에게 세금정책을 소개하려고 만든 자료"라고 밝힘.
 - 중국 기업들이 최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선특구의 저임금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한 북한 전문가는 "나선특구의 최저



임금이 개성공단보다 높지만 중국내 임금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 동북 3성 기업들의 투자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봄.

- "北, 극동 아무르주 농지 20만 ha 임대 협상"(9/8, APN)
 - 러시아 극동 지역에 곡물 생산을 위한 농업 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북한이 극동 아무르주(州)의 농지 20만 헥타르(ha)를 임대하기 위한 주정부 측과의 1차 협상을 끝내고 이번 주 중에 2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현지 인터넷 뉴스 통신사 APN이 8일 보도
 - 북한 농업성 대표단은 지난 1일 아무르주 주도 블라고베센스크를 방문해 주정부 인사들과 협상을 벌였으며, 아무르주 주정부 대외경제관계 국장 이고리 고레보이는 "1차 협상에서 1ha당 연 50루블(약 1천800원)에 농지를 임대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최종 가격은 협상이 끝나야 정해질 것"이라고 전함.
 - 북한은 매년 반복되는 식량난 극복을 위해 러시아 극동 여러 지역에 걸쳐 수십만 ha의 농지를 임대해 그곳에서 콩, 감자, 곡물, 채소 등을 재배한 뒤 이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FAO "내달 중순 北에 구제역 백신 전달"(9/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다음 달 중순 북한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 이 단체는 "소, 돼지 등 가축 200만 마리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가축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욱 취약해지고 구제역에 취약할 수 있어 가을에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 북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9개 농장에서 돼지 1만 500여 마리, 소 1천100여 마리, 염소 170여 마리 등이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가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黃北道 일꾼들의 '신평금강명승지' 개발공사 적극 추진 및 黃南道 삼천군 등 살림집·공공건물들 100% 水害복구 보도(9/7, 평방)
- 김정일 著作(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8돌 즈음 "김정일의 영도따라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독려(9/7, 중통·노동신문)

다. 군사

- "北 교란거리 100km이상 전자전 공격장비 개발 중"(9/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지상 최대 교란거리가 100km 이상인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기 신형 전자전 공격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확



- 인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전자전 공격·교란무기'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구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다양한 통신·레이더 교란 장비 약 20여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북한이 최근 자체 개발 중인 신형 전자전 공격장비에는 교란거리가 100km 이상인 GPS 교란기도 포함된 것으로 군은 파악
 - 지금까지 북한은 50~100km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는 차량 탑재 러시아제 재밍(jamming, 전파방해) 장비를 도입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2~3개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자전 부대의 경우, 평양권에 1개 연대가 있고 전방 군단에 각 1개 대대 규모의 전자전 부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
 - 적의 전자기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을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군은 "확인된 첩보는 없지만 북한의 신형 전자전 장비 개발 추세와 각국의 EMP탄 개발 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도 향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라. 사회·문화

- **北매체 "태권도 세계대회 열기 들끓어"(9/5,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는 6일 일주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막이 오르는 제17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수도(평양)가 들끓고 있다"고 태권도 대회의 열기를 전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일 "이번 대회에 80여 개국 선수 1천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며 "대회 마크와 컵(트로피), 상장, 메달이 제조되고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 보장 사업도 끝났다"고 전함.
 - 대회 주관 기관인 국제태권도연맹(ITF)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룡외이맹 ITF 부총재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 행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장과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김경호 북한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팜루 국제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北보건성-WHO,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9/7,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H5N1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변종이 발견되면서 북한 보건성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WHO 평양사무소의 요나스 테게근(Yonas Tegegn)박사는 방송에 "북한 보건성에 국제기준에 따른 AI 경계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과 함께 발병 시 농업성이 보건성에 바로 통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AI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내 32개 병원을



'AI 감시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힘.

● "北 결핵보균자 매년 10% 증가"(9/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해온 미국 스탠퍼드대 사론 페리 박사는 7일 최근 5년간 북한에서 결핵보균자가 매년 10% 증가했다고 밝힘.
- 페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를 낸 결과 북한에서 과거 5년간 해마다 10%의 결핵보균자가 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결핵보균자가 1~2%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보균자 증가는 우려 된다"고 말함.
- 그는 "북한 인구의 50%가량이 잠복기 결핵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염성은 없다"며 "문제는 잠재보유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양 결핍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

● 21차 국제태권도연맹총회 평양서 열려(9/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제21차 총회가 7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총회 참석자들은 지난 대회 이후의 사업총회(결산)과 연맹의 강화·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에 이어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22차 ITF 총회를 불가리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지난 6일 개막된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일정 속에 열린 이날 총회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장웅 ITF 총재, 팜루 ITF 사무총장, 룡와이맹·유리 칼라쉬니코프 ITF 부총재, 강능수 내각 부총리,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

● 장웅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체육교류 기대"(9/7, 미국의소리(VOA))

-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에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장 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남북 공동개최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 평양도 휴대전화 소음 골머리...에티켓 강조(9/8, 조선중앙TV)

-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에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장 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남북 공동개최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 "北주민 2달러 지폐 수집 열기...품귀현상"(9/9,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에서 미화 2달러 지폐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
 - 평양에 거주하는 한 화교는 "2달러 지폐를 소지하고 있으면 재수가 좋다는 소문이 북한 전역에 번지면서 이를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암달러상에게 부탁하거나 은행에 가도 구할 수 없다고 방송에 전함.
 - 2달러짜리가 품귀 현상을 빚게 되자 요즘 중국 선양이나 단둥, 옌지 등 변경 도시에서 2달러짜리 지폐를 구하는 북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2달러짜리 거래 가격이 1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방송은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9.5 모향산 보현사에서 봉행(9/5, 중통)
- 北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8.1 개막/5월1일경기장), 국내외 관심속에 연일 성황리에 진행中(9/6, 평방)
- 제17차 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9.8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8,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강능수(내각 부총리/개막연설), 최용해(黨 비서), 박명철(체육상), 김경호(北태권도위원장), 양만길(평양시민인민위원장/개막사), 장웅(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개막연설), 부총재들, 하인 버브르겐(스포츠어코드 위원장/개막연설) 등 참가

2. 대외정세

가. 일반

- HRW·앰네스티, 北 인권개선 유엔 압박(9/7, 연합뉴스)
 -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AI) 등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국제 연대 기구를 만드는 등 유엔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7일 오전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메이지(明治)대학교 '아카데미 커먼 빌딩' 2층에서는 HRW 등 세계 15개국 30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창립 대회를 개최
 - HRW 등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매년 대북 인권 개선 결의를 하거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개인이 조사하는 수준으로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유엔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만들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현장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 후진타오 "조선 강성국가건설 큰 성과 축원"(9/8,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8일 "조선인민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새롭고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후 주석은 이날 북한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을 기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조(中朝·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隣邦)"임을 강조하면서 "중조 친선협조 관계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 노력 밑에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으며 쌍방 사이의 교류와 협조도 여러 분야에서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후 주석은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와 공동 명의로 이 축전을 김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에게 보내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기남, 9.6 만수대의사당에서 시리아 신문사 대표단과 담화(9/6, 평방)
- 김영남, 9.7 駐北 미얀마 '틴 우' 대사 신임장 접수(9/7,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9.7 駐北 미얀마 新任 대사와 담화(9/7, 중통)
- 최룡해(黨 비서), 9.7 訪北 베트남 노동총연맹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9/7, 중통·중방)
- 中國 후진타오 주석·우방귀·원자바오, 9.8 '공화국 창건' 63돌 즈음 김정일·김영남·최영림에게 축전(9/8, 중통)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9.8 독일사회민주당출신 유럽의회 의원(페터 지몬) 일행과 담화(9/8, 중통)
- 김영남, 9.8 우간다 내무상(힐라리 오네크) 일행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8,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김외교 "핵안보회의 때 북핵 별도논의 있을 것"(9/5,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주변 국가들이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양자 또는 몇 나라 간 회담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 장관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인 김 장관은 이날 준비기획단과 주관사들 사이의 기본약정 체결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북핵 문제는 의제에 들어 있지 않으나 관련국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함.
 - 그는 6자회담 재개 시점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6자회담이 언제 열릴 것



이라고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와 3자, 다자간 회의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핵안보정상회의 북한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를 다 지킨다면 북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결국 공이 북한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

● 러 "비핵화 등 위해 조선과 긴밀히 협력"(9/8, 조선중앙통신)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선(북한)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 보로다브킨 차관은 지난 6일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 기념 연회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호상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이날 연회에는 왕즈귀(王志國) 철도부 부부장, 쉬회이바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전쟁이론·전략연구부 부부장, 우둥허(武東和) 중조(中朝·북중)우호협회장 등 중국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

3. 대남정세

● 금강산기업들 "北 '3대조건' 수용했다 돌변"(9/5, 연합뉴스)

- 금강산지구 투자기업 모임인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는 5일 북한이 새로 만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추진하는 금강산 국제관광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오정원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민관합동협의단이 7월 말 금강산 문제 협의차 방북했을 때 북한은 관광재개를 요구하며 우리 측이 요구하는 '3대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했다"며 "깊은 내용은 문서화하자고 한 뒤 헤어졌는데 왜 돌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힘.
- 오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익이 나든 안나든 (북한이 추진하는 금강산 국제관광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그는 "남북 당국은 겨레의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쌓아온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현대아산에도 기존의 금강산관광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

● 北 "금강산중단 피해 총 6억 달러...물수는 합법"(9/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5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지난 3년간 직접적 피해 1억 달러를



- 포함해 총 6억 달러의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며 남측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합법적인 주권행사라고 주장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재개발 가망도 없는 금강산 관광을 보며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며 "(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은)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 해내외(국내외)의 절절한 염원, 세계의 수많은 기업인과 투자가의 요청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남북 간 투자보호에 관한 협의서' 제4조를 인용해 "공공의 목적으로 상대방 투자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몰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지구내 재산은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남측과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이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 전반이 3년간 물에 잠기고 부식·부패된 상태로 조금 더 있으면 완전히 못쓰게 된다"며 "(남측 기업에) 재산등록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은 재산침해가 아니라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

● 北대풍, 현대아산에 금강산자산 협의처리 제안(9/6, 연합뉴스)

- 북한 측 외자유치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에 대한 일방적 처리는 있을 수 없다면서 협의 처리를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개인 사유재산 보호가 명시돼 있으며, 이 때문에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해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힘.
- 박 총재는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금강산특구 시범여행 과정에서 여행단이 온정각 등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 방문을 요청했으나 현대아산과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함.
- 그는 그러면서 "조선대풍그룹은 북측 정부로부터 금강산 특구 개발과 관련해 위임을 받은 상태"라며 "정치적인 문제가 배제된 금강산 특구의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조선대풍그룹이 통로이기 때문에 현대아산에 금강산 자산 협의 처리를 제안한다"고 강조
- 그는 아울러 "현대아산이 금강산 내의 해당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든, 아니면 임대 또는 매각하든 간에 선택은 현대아산의 몫"이라며 "그와 관련해 논의하자는 게 조선대풍그룹의 입장"이라고 주장
- 박 총재의 이런 제의는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선포하고 나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에 대해 일방적인 몰수 후 매각 방식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 25일 신규 금강산 사업자로 선정된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 무역회사가 금강산관광특구지도국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조선대



풍그룹이 '대표성'이 있는 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관광공사 "금강산재산 몰수 부당, 대화 재개하라"(9/6, 연합뉴스)**
 - 한국관광공사는 6일 금강산에 있는 자사 소유의 재산을 동결·몰수한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장에게 발송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공사는 전통문에서 "온천장과 문화회관 및 온정각에 대한 동결 및 몰수 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재산권을 귀측(북한)이나 제삼자가 침해 또는 이용하는 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
 - 또 "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자산 손상 및 안전사고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으며 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

- **정부, 금강산 관광·투자자제 외교조치(9/6, 연합뉴스)**
 - 정부는 6일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국에 관광 및 투자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국 주재 우리 공관에 관련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외교적 조치의 대상은 금강산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지할 개연성이 있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이 될 것으로 관측
 -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통일부 회의실에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관광사업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 **北, '南 금강산관광 자제요청' 비난(9/7, 우리민족끼리)**
 - 정부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금강산 관광 자제와 투자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논평을 통해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애걸하다 못해 이와 관련한 편지까지 외국 대사관에 보낸다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실로 역겹기 그지없다"며 "그런 몸부림으로 금강산 국제관광에 제동을 걸 수 있겠는가"라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금강산 국제관광을 진행하는 현재도 남측 현대가 관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아직 현대 측과 제소를 논의해본 적이 없다"며 "(국제문제화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남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실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0호(9.6)】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美國의 요구에 따라 北과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범죄적 책동"으로 비난하며 '기지건설 반대 투쟁' 선동(9/6,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김외교 "핵안보회의 때 북핵 별도논의 있을 것"(9/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주변 국가들이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양자 또는 몇나라 간 회담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인 김 장관은 이날 준비기획단과 주관사들 사이의 기본약정 체결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북핵 문제는 의제에 들어 있지 않으나 관련국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계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와 연계돼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 그는 6자회담 재개 시점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6자회담이 언제 열릴 것이라고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와 3자, 다자간 회의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핵안보정상회의 북한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를 다 지킨다면 북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결국 공이 북한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미, '후속대화' 현안 조율.. "北 반응 아직 없어"(9/9)

- 방미중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 만나 북한과의 후속대화 추진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 한미 양국은 지난 7월말 진행된 남북 비핵화회담과 뉴욕 북미 고위급대화를 통해 북한에 제시한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관련한 북한 측 동향을 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지난달 하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진 '핵물질과 핵실험 중단(모라토리엄)'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서 전해온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협의에 언급, "양자적 현안과 한반도와 관련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



- 넓게 논의했다"며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였다"고 말했다.
- 앞서 위 본부장은 7일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빌 번스 국무부 부장관,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등 미 행정부의 북핵 정책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6자회담 재개 및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음.
 - 다만 당초 7일 예정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회동은 보스턴 소재 터프스대 플래처스쿨 학장을 겸하고 있는 보즈워스 대표가 기상악화로 워싱턴에 오지 못해 불발됐음.
 - 캠벨 차관보 등과의 협의를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위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북측의 올바른 대응이며, 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대화 과정을 이어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밝힌 '6자회담 무조건 재개' 입장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교해서 새로운 게 없다고 본다"고 평가, 후속 대화 개최를 위한 북측의 '사전조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음.

● <걸어지는 '평양의 침묵'..대화 다시 정체되나>(9/9)

- 평양이 다시 침묵하고 있음. 6자회담 재개의 길목인 남북-북미 후속대화가 9월 들어 가시권에 들어오는 듯했으나 정작 키를 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지난달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러·방중 이후 열흘이 넘도록 북한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직·간접적 메시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임.
- 이에 따라 지난 7월 남북-북미대화 이후 모처럼 불씨가 살아난 6자회담 재개 흐름이 또다시 정체(停滯)국면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평양의 이 같은 '무반응'은 일단 비핵화 사전조치 수위를 둘러싼 고도의 기싸움 성격이 있어 보임.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중단을 필두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핵화 사전조치로서 일괄주문하고 있는 한·미에 일정한 '양보'를 하라는 압박의 의미임.
- 사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WMD 실험을 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한·미의 반응을 타진해보려는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옴.
- 하지만 한·미의 반응은 냉담했음. 6자회담 재개 이후 실행을 전제로 하는 WMD 모라토리엄 선언만으로는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불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임.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후속대화에 대해 장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한·미가 비핵화 사전조치와 관련해 한 발짝 더 양보하라는 시위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임.
-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평양이 이 같은 침묵은 앞으로의 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큰 틀의 입장과 전략이 정리되지 않았



- 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을 바라보는 북한의 기본전략은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됨. 그러려면 '협상의 파이'를 키우는 게 급선무이고 그 핵심에는 UEP가 놓여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임.
 - 그러나 현재 한·미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취해야할 사전조치의 첫머리로 제시한 것이 UEP임. 여기에는 일본이 가세하고 있고 러시아도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를 6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것도 특별한 보상 없이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6자회담을 통해 큰 틀의 '딜'을 시도하려는 북한으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문제임.
 - 물론 6자회담 의장국을 자임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우군'임은 분명해 보임. 그러나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러시아가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정수준 이상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6자회담 재개로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임.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으로서는 현 국면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쪽으로 상황판단을 내리고 근본적으로 전략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게 정통한 소식통들의 분석임.
 - 외교소식통은 9일 "지금 일정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버티다가 6자회담을 통해 판을 키우는 게 나올지를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 이에 따라 당장의 국면은 북한이 침묵모드를 이어가고 한·미는 '전략적 인내'를 꾀하며 '무언의 기 싸움'을 벌이는 답답한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 보임.
 - 특히 현 시기는 '청문회 국면'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 후보자의 7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 이어 류우익 통일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오는 14일 예정돼 있음. 북한으로서는 청문회를 통해 한·미의 기류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 이에 따라 추석연휴 이후인 9월 중·하순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6자회담 재개흐름의 방향과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현재의 침묵모드를 이어갈 경우 남북-북미 후속대화가 동력을 얻기 어렵지만 내부적인 상황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대화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각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이미 대화국면의 한복판에 들어선 상황에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북미보다 남북 간 우선 대화 선호"〈당국자〉(9/9)

- 정부 고위 당국자는 8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와 관련, "지금은 남북이



- (북미보다) 먼저 움직이는 모양이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모두 최근 우리의 대화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와 북미 간 대화의 선후관계에 대해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남북 간 대화가 우선으로) 됐으면 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는 우리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 접촉과 뉴욕 북미 대화에 이어 향후 후속 대화가 진행될 경우 남북대화가 북미대화에 선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특히 그는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언급, "미국은 이렇다 할 입장을 갖지 않고 남북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혀 미 당국도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을 수용하고 있음을 내비쳤음.
 - 이어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긴장이나 대결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 대화국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양자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이런 국면을 이어가면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다만 "뉴욕 북미대화 이후 북한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최근의 조치 등이 거슬리지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보면 쉽사리 큰 양보를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험난한 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내부 상황 등이 변수"라고 진단했음.
 - 그는 아울러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이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음.
 -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동안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이밖에 그는 북핵 정책과 관련한 국제 공조에 대해 "한·미·일의 협조는 과거 어느 때와 견주어 봐도 지금이 상대적으로 최고"라고 평가했으며, 러시아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내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는 적극적인 대(對)아시아 외교를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美NGO 10일까지 대북수해지원품 분배감시"(9/5)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지난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북한에서 의약품, 위생용품, 정수기 등의 구호물자가 수재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 '사마리탄스 퍼스'를 비롯한 미국의 5개 민간구호단체 관계자 6명은 지난 2일 평양에 도착해 미국에서 보낸 화물기를 접수하고 강원도와 황해도에서 분배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이들은 북한의 홍수 피해현황도 점검할 계획임.
-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VOA에 "분배감시단 관계자들이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면 2차 지원분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중·북 관계

● 후진타오 "조선 강성국가건설 큰 성과 축원"(9/9)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8일 "조선인민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새롭고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후 주석은 이날 북한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을 기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조(中朝·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隣邦)"임을 강조하면서 "중조 친선협조 관계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 노력 밑에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으며 쌍방 사이의 교류와 협조도 여러 분야에서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그는 이어 "우리(중국)는 조선과 함께 계속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중조 친선이 활력에 넘치게 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가져다주며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후 주석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 인민은 독립과 자주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강국으로 나가는 시대의 장을 열어냈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지난 63년간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위업에서 풍만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칭송했음.
- 후 주석은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와 공동 명의로 이 축전을 김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에게 보내왔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라. 일·북 관계

● 日 총리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전력"(9/11)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취임 9일 만인 11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음.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학회 대표와 요코타 사키에(横田早紀江)씨 등을 만났음.
- 노다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납치 문제는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납치된 이들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시간과의 싸움을 고려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 문제 해결에는 국제사회의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달 하순 유엔 총회 등의 국제회의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이즈카 대표는 "북한은 3년 전의 재조사 약속을 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있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이날 면담에는 마스모토 데루아키(増元照明) 가족회 사무국장, 아마오카 겐지(山岡賢次) 납치문제담당상,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 등이 동석했음.

마. 러·북 관계

● "지난달 러시아 곡물 1만8천t 北에 전달"(9/7)

- 지난 8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곡물 1만8천t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밀 1만1천200t과 밀가루 6천600t을 북한으로 보냈고 이 곡물은 북한의 12개 식품 가공공장에 분배됐다고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이 밝혔음.
- 러시아 정부는 8월 초 식량난에 빠진 북한에 식량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9일 첫 지원분을 실은 배가 함경남도 흥남항에 도착했음. 스카우 대변인은 전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9월에 2만2천t의 밀과 밀가루가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러 "비핵화 등 위해 조선과 긴밀히 협력"(9/8)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선(북한)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음.
- 보로다브킨 차관은 지난 6일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 기념 연회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호상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영재 주러 북한대사는 "조러(북·러)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가일층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연회에는 러시아 국영철도회사와 국영가스회사(가즈프롬), 러·북 우호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음.
- 자이진(翟雋)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7일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기념 연회에 참석해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 정신에 따라 중조(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임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기념사를 통해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하신 친선을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이날 연회에는 왕즈궈(王志國) 철도부 부부장, 쉬화이바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전쟁이론·전략연구부 부부장, 우동허(武東和) 중조(中朝·북중)우호협회장 등 중국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했음.

● 러 대통령, 北정권 창건 63주년 축하 전문(9/10)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선(북한)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음.
- 보로다브킨 차관은 지난 6일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 기념 연회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호상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영재 주러 북한대사는 "조러(북·러)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가일층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연회에는 러시아 국영철도회사와 국영가스회사(가즈프롬), 러·북 우호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음.
- 자이진(翟雋)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7일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기념 연회에 참석해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 정신에 따라 중조(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임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기념사를 통해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하신 친선을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이날 연회에는 왕즈궈(王志國) 철도부 부부장, 쉬화이바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전쟁이론·전략연구부 부부장, 우동허(武東和) 중조(中朝·북중)우호협회장 등 중국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했음.



바. 기 타

● 北, 中창춘서 라선특구 투자유치 설명회(9/7)

-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황철남 부위원장이 7일 중국 창춘(長春)에서 라선특구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 황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7회 지린(吉林)·동북아경제무역박람회의 '조선(북한)의 날 및 중·조무역투자항목상담회' 행사에서 "라선은 중국, 러시아와 접해 있고 유럽이나 북미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천혜의 부동산향을 확보하고 있어 국제 무역의 최적지대"라고 밝혔다.
- 그는 중국 훈춘(琿春)-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가 오는 11월 완공되고 러시아 하산에서 두만강을 거쳐 라진항에 이르는 광궤 철도 보수공사도 오는 10월 마무리되며 라진과 중국의 연길(延吉)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 개설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북·중·러 3국 간 물동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음.
- 그는 또 라선특구 용수 해결을 위해 2천200만^m를 저장할 수 있는 수원지를 확보했으며 이곳에 2천100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도 건설, 전력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또 태국 기업이 2천688만 유로를 투자, 국제전화가 가능한 유·무선 통신망을 갖췄고 수심이 깊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라진과 선봉, 웅상항 등 3개 부동산향이 있으며 경관이 빼어난 20여 개의 섬이 있어 국제적 관광지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그는 유엔의 지원으로 라선 해운대와 상업대에 국제무역학과와 기업정보학과가 설치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황 부위원장은 50여 개의 법령을 정비, 라선 투자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투자 원금은 물론 이윤을 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각종 세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라선특구는 470km²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경제 특구로, 조(북한)·중 공동개발을 통해 라선을 세계 일류의 경제 특구로 건설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적십자사 北수해 지원금 30% 확보"(9/9)

- 국제적십자사가 대북수해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모금을 호소한 440만 달러 가운데 30%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30일까지는 수해지원금의 3%를 확보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10일간 국제사회의 지원이 10배 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의 수재민 2만4천명이 2개월간 먹을 수 있는 쌀과 옥수수 등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국제적십자사 베이징(北京) 사무소



의 프랜시스 마커스 대변인은 RFA에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수재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몇 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하원의원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논의할 용의"(9/5)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롭 위트먼(3선, 공화당) 의원은 5일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에 대해 "직면한 위협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한국이 자국을 방어할 능력을 염두에 두면서 사거리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방한 중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위트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과 만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휴전선 후방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 북한 공격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
- 위트먼 의원은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판매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한국에 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호크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고, 모든 결정이 한국의 최고의 이익에 맞게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앞서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 역시 "글로벌호크를 미국에서 사온다고 해도 (탑재중량이 907kg인 만큼 탑재중량 500kg 이하만 용인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미국의 군사기술이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한국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원유철 위원장의 지적에는 "기술 이전 마감 시한이 흐른 뒤에는 기술 자체가 너무 구식이 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과 미국은 이런 기준에 묶여 있어 기술이 뒤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위트먼 의원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어떻게 보면 골목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집단적으로 중국의 움직임에 저지하거나 막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면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계속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환담회에는 매들린 보달로(5선, 민주당) 스티브 팔라조(조선, 공화당) 의원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등도 참석했다.

● "미, 한국보다 한미 FTA 먼저 처리할 듯"(9/7)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하원이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에 대한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 처리가 이달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미 의회의 움직임과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미국은 GSP 연장안이 현지시간으로 오늘 하원을 통과하는대로 한미FTA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최 대표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키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달 중 TAA 제도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병행 처리키로 지난달 약속한 바 있다"며 "GSP 연장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 곧 미 행정부도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 최 대표는 "우리 국회도 미 행정부의 법안제출 등을 감안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내달 비준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의 10+2 요구안에 대해서는 "재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 美하원 국방위원장 이달 말 방한(9/8)

- 벅 매키언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7일 자신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이 이달 말 중국, 대만,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매키언 위원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방문 계획을 전하면서 "이 방문은 의원들에게 우리가 그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 나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 "캠프 캐럴 지하수서 고엽제 성분 검출"(9/9)

-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외부 지하수에서 고엽제 관련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 5월 퇴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씨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을 제기한 이후 고엽제 관련 성분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한미 공동조사단은 9일 경북 칠곡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기지 내부인 41구역 내 지하수 관측정 5개소에 대한 한미 양측 수질조사 결과 한국 측 분석에서 고엽제 성분인 2,4,5-T가 0.161 $\mu\text{g}/\ell$ 가량 검출됐다.
- 다만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9 $\mu\text{g}/\ell$)의 50분의 1 정도로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 미측 분석에서는 2,4,5-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 고엽제의 다른 성분인 2,4-D와 고엽제 불순물인 2,3,7,8-TCDD는 한미 양측 분석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음. 다른 다이옥신류는 한국 측 분석 결과 4개 관측정에서, 미측 분석 결과 1개 관측정에서 극미량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41구역과 D구역 부대 경계를 따라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 6개소와 기지 인근 지하수 이용관정 10개소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에서는 1개 관정에



서 2,4-D와 2,4,5-T가 정량한계 수준의 극미량($0.00088\mu\text{g}/\ell$, $0.00178\mu\text{g}/\ell$)이 검출됐음. 이는 WHO 먹는 물 기준(2,4-D $30\mu\text{g}/\ell$, 2,4,5-T $9\mu\text{g}/\ell$)의 3만분의 1과 9천분의 1 수준으로, 재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음.

-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지만 캠프 캐럴 내와 기지 밖에서 고엽제 관련 성분이 직접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41구역은 당초 미군이 화학물질을 보관하던 곳으로 이 지역 지하수에서 고엽제 관련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고엽제 성분이 검출된 41구역 수질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음.
- 고엽제 성분 외에 발암성 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41구역과 기지 밖 일부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했음. 특히 VOCs 일부 항목은 기준을 최대 9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지 외부 지하수 9개소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등으로 인해 먹는 물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 공동조사단은 우선 음용중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오염원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음.
- 한미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말 방한한 스티브 하우스가 고엽제 드럼통 매립 지역으로 신규 지목한 헬기장 남쪽 경사지에 대해 지구 물리탐사를 실시했으나 금속성 드럼통 매립을 나타내는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한미 공동조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기지내부 토양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발표할 예정임. 미량이지만 기지 내 지하수에서 고엽제 관련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향후 발표될 토양조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 공동조사단은 승인 절차를 밟아 주한미군의 과거 근무자 인터뷰 결과와 2010년 미군 자체 환경조사 보고서 등도 공개할 계획임.

● **李대통령, 20~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9/9)**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0~23일 제66차 유엔 총회와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 이 대통령은 20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양심의 호소 재단'으로부터 '세계 지도자상'을 받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와 만찬을 함께함.
- 세계지도자상의 주요 수상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등이 있음.
- 21일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민주주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등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사회 공생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 대통령은 22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에 참석, 기초 연설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력 이용 안전 증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내년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뉴욕 방문 기간 두 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신임 일본 총리 등과의 회담 가능성도 있음. 이 대통령은 이어 시애틀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를 하고 하룻밤을 묵은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나. 한·일 관계

● 日대사 "한일 새로운 100년, 경쟁과 협력시대"(9/5)

-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5일 "앞으로 100년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대등한 힘의 관계를 이뤄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토 대사는 이날 경기도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100년의 관계'에 대해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국과 일본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관계 변화가 시작됐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연대감이 강화됐다"며 "최근에는 한류 등 문화 개방으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진단했음.
- 그는 "양국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국제인이고 양국은 인재를 중요한 나라이므로 이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강화해가는 시대, 아시아에서 협력의 중추가 되는 시대,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는 시대를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음.
- 무토 대사 강의는 한 시간가량 진행됐음. 강의를 끝난 뒤 학생들은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와 원전 유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질문했음.
- 대부분의 학생은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어 대신 일본어로 강의해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독도 등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됐다"며 아쉬워했음.

● 日 외상 "독도 불법 점거·지배되고 있다"(9/6)

- 일본의 신임 외무상이 독도가 불법적으로 한국에 점거돼 있다는 자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했음. 아사히신문은 6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독도와 쿠릴열도(일본 명칭은 '북방영토')가 "법적 근거 없이 점거·지배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겐바 외무상의 이런 발언은 자민당 정권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공식 입장임. 겐바 외무상은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 그는 "일본과 중국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과거로 韓日관계 지장 받아선 안 돼"(9/6)**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로 인해 미래로 나가는 데 지장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신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국제사회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노다 총리가 지난 2008년 취임식에 참여한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며 큰 개인적 인연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히 "동아시아 문제나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양국의 협력이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날 것을 기대하고,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의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문제도 한·미·일 3국이 공고히 협력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자"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게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자세"라며 "북한 문제도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했지만 앞으로도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음.
- 노다 총리는 "한국은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참된 일한관계를 구축하자"면서 "앞으로 국제관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한 지도력을 구축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음.
-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경제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日총리 "영토문제 행동해야할 땐 행동해야"(9/7)**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영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아시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10일 발매될 월간지 '보이스'에 '나의 정치철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음.
- 노다 총리는 이 논문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영해 침범 사건 등과 관련 "과거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와 간 나오토 정부가 반드시 충분히 대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우리의 고유 영토를 지키기 위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행동할 일이 있으면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노다 총리는 또 "영토 영해와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는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물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와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등의 영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노다 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가 주창했던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은 큰 비전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밝혀, 이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이는 하토야마 전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창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금이 갔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정부, 조만간 日에 위안부 문제 협의 제안(9/8)

- 외교통상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한편 조만간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로 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일본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제안은 조기에 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서울의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도쿄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안 내용 검토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안 시기가 이달 중·하순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됨.
- 정부는 제안 시 협의 시간이나 장소는 명시하지 않을 예정임.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한 양자 협의는 1990년 때까지는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는 정상회담이나 특사 방문 등의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도 논의됐음.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다"(외교부 당국자)고 전망하고 있음. 그동안 일본이 사법당국의 판례를 통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협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협의 자체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옴.
- 외교부는 일본이 제안을 거부하면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임.
- 외교부는 협의 제안 및 중재위 구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동북아국장, 국제법률국장 등이 참여하는 TF도 조만간 발족하기



로 했음. TF 팀장은 차관이나 차관보급에서 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음.

다. 한·러 관계

● '韓선박 북극해 진출 논의' 한-러 해운회담(9/6)

-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 항로보다 훨씬 짧은 북극해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 협력에 나섬. 국토해양부는 한국 국적 선사의 북극해 진출과 우리 기업의 극동 지역 항만개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6~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러시아 해운회담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음.
- 이번 회담은 소말리아 해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양 항로의 대체 해상루트로 부각되는 북극해 항로의 이용 논의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마련됐음.
-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로테르담 운항 거리는 인도양 항로가 2만100km, 북극항로가 1만2천700km로 북극항로가 7천400km나 짧아 운항 소요기간 10일이 단축됨.
-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해빙 때문에 특수선박과 러시아 쇄빙선을 이용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운송거리 단축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음.
- 전기정 국토부 해운정책관이 정부 대표로 회담에 참석해 러시아 교통부, 해양연구소, 원자력 쇄빙선 회사 등의 주요 인사와 만나 러시아의 북극해 정책, 쇄빙선 지원 등의 선박 통과절차와 한국 측의 북극해 시범 운항, 극지선원 교육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러시아도 우리의 북극해 진출 계획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북극항로 활용은 극동과 유럽 간 해상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한-러 해운·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극해 시범운항은 우리 선사가 최초로 북극해에 진출한다는 상징성을 가질 뿐 아니라 향후 진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는 북극항로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러시아뿐 아니라 또 다른 주변 국가인 노르웨이와 내년 상반기 해운회담을 갖고 내년 7~9월께 우리 국적 선사의 북극해 시범운항을 추진할 계획임. 북극해 항로는 2009년 독일 벨루가선사 소속 화물선 2척이 최초 운항한 이후 노르웨이 등의 유럽 선사들이 지속적으로 운항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또 이번 러시아와의 해운 회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항만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과 양국 간 선박의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함.

● <한러 정상 세차레 만날 기회..가스관사업 주목>(9/8)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한·러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 가운데 양국 정상이 오는 11월 초·중순 세 차례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됨.
- 8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올 하반기에 함께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는 모두 3개임.
 - 11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12~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다. EAS에는 미국과 함께 러시아 정상이 올해 처음으로 참석함.
 -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연쇄적인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11월 중 한차례 한·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음.
 - 외교가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한·러 외교장관 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즈프롬과 한국가스공사 간 실무협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동안 북한과 협의를 벌여온 가즈프롬 실무자들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가스공사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한·러 양국은 다음 달 하순 경제공동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상당한 진척을 볼 것이라는 관망이 나오고 있음.
 - 만일 한·러 양국 정상이 만나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그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 전반에 큰 틀의 변화를 가져다줄 변수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임. 일각에서는 가스관 사업을 고리로 남북 고위급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한·러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가스관 사업에 대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낼지 미지수라는 신중론이 좀 더 우세함. 러시아 측이 시장 확대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기술적 난점이 적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러시아는 일단 한·러, 북·러 간 협의를 별도로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가급적 연내에 남·북·러 3자 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대만큼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이에 따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알맹이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려면 결국 실무차원의 협력이 분명한 진전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분석임.
 - 외교 소식통은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게 정부의 대응기조"라면서 "한·러 정상이 만나더라도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처럼 선언적이고 원칙적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1989년 한-러 가스관 계약서' 보관>(9/9)

-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기업에 몸담았던 시절 맺었던 구소련과의 가스관 양해각서(MOU)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 최근 동북아의 관심사로 떠오른 남·북·러 가스관의 기원은 지난 1989년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이 대통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구소련 정부와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북방 외교의 첨병에 서게 됨.
- 이 대통령은 당시 체결했던 계약서와 가스관 예상 루트를 담은 지도를 포함한 서류철을 여전히 보관하고 참모진에게도 회람시키면서 최근 진행된 가스관 사업에 참고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 지도는 가스관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끌어와 육로 또는 해상으로 남한에 공급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 같은 계약서는 앞으로 한·러 정상 간에 가스관 사업 논의를 재개할 경우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당시 계약 체결 금액은 40억 달러(한화 4조3천억 원) 이상으로 서명이 20여 년 전에 이뤄진 것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임.
- 이 대통령은 전날 생중계된 TV 특별좌담이 끝난 후 방송 스태프, 참모진 등과 차를 마시며 양해각서 체결 사실 등의 후일담을 소개하면서 "아직 법적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대통령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타당성도 여전히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업적 관점에서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스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았다"고 말했다.

라. 미·중 관계

● 中 "美, 對대만 무기판매는 '위험한 짓'"(9/9)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주장하는 미국 의원들을 '미친 사람들(madmen)'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고 '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인민일보는 9일 '중성'이라는 필명의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 승인 법안을 '암(cancer)'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현재 미국 의회의 일부 미친 사람들이 이런 '암'을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미 의원들을 향해 "극도로 오만하다"고 비난했음. 신문은 이어 "이런 미친 생각들이 실현되면 중·미 관계에서 어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음.
- 신문은 논평에서 세계적 경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현 관계가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며 이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일부는 과거 역사의 조류로 되돌아가길 원하지만, 이 경우 그들이 치러야



할 처참한 대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이런 명칭한 의원들을 위한 한마디 충고는 도를 넘지 말고,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경고했음.

- 대만은 현재 남아있는 낡은 F-5 전투기를 퇴역시키기 위해 최대 동맹국이자 무기 공급국인 미국으로부터 잠재적으로 80억 달러 상당의 신형 F-16 전투기 66대를 구매하길 희망하고 있음.
- F-16 전투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텍사스주(州)의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이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에서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로크 대사 첫 공개강연.. "중국 부상 환영"(9/10)

- 미국의 첫 중국계 주중 대사로 임명돼 관심을 모았던 게리 로크 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공개 강연에서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는 뜻을 피력했음.
- 10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로크 대사는 전날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400여명의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미국은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 로크 대사는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공동 안보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크 대사는 "미국과 중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음.
- 이어 그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인은 저축을 열심히 하지만 미국인들은 반대로 정부와 개인의 빚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음.
- 로크 대사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을 언급만을 했을 뿐 구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지는 않았음.
- 공개석상에서 자주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곤 했던 존 헨츠먼 전 대사와 달리 로크 대사는 이날 '다자 하오(大家好, 모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외에는 줄곧 영어로 강연했음. 중국계로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로크 대사가 중국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은 자신이 '중국계가 아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의 대사로 인식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종말이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실고 "성공한 중국이 미국을 더 번영하게 할 것으로 확신 한다"고 언급했음.



마. 미·일 관계

● 일본인 57% "미군 주둔 찬성"(9/5)

- 북한 핵 문제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주일 미군을 지지하는 일본인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5일 AP통신이 시장조사기관 GfK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7%, 철군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34%로 나타났음.
- 지난 2005년 AP통신과 교도통신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과 철군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로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임.
-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주변국 정세가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주요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0.5% 미만, 중국에 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들은 7%에 머물렀음.
- 특히 북한을 세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이들은 지난 2005년(59%)보다 증가한 80%로 나타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싫어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90%에 달했음.
- 한국에 대해서는 31%가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27%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음.
- 그런가 하면, 자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 및 이에 따른 원전사태를 꼽은 이들이 56%로 압도적이었고, 정치 관련 이슈를 지적한 응답자가 18%로 뒤를 이었음.
- 아키히토(明仁) 일왕과 자위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78%와 74%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각 각료와 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11%와 9%에 그쳤음.
-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29일부터 8월10일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8%포인트임.

● 日서 美대통령 전용기 비행정보 인터넷 유출(9/10)

-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의 관제사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비행계획을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음.
-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네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주임 항공 관제사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의 비행계획 화상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성이 조사에 나섰다.
-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유출된 미 대통령 전용기 관련 정보는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작



- 년 11월12일 서울에서 일본으로 향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원의 비행계획임.
- 유출된 비행계획은 에어포스 원의 이착륙 장소, 비행경로와 고도 등이 상세하게 보이는 화면 사진 2장과 비행경로를 표시한 레이더 화면 사진 3장, 관제탑 내 업무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모두 12장임.
 - 국토교통성은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대 기밀 유출로 보고 관제사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 이 관제사가 유출한 정보에는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직후 원전 상공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 항공법에는 항공기가 운항전 비행계획을 관제소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음. 항공기의 비행계획은 테러 방지 등 안전을 위해 엄중히 관리되어야 하는 극비 정보임.
 - 관제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비행경로와 고도 등의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면서 항공기를 관제함. 정보를 유출한 관제사는 "2001년부터 블로그를 열어 디지털카메라로 직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게재해 지인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정상회담 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음.
 - 방위성 간부는 "이번 사건은 위키리크스의 정보 폭로보다 심각하다"면서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됐다"고 말했음.

바. 중·일 관계

● 〈中日 센카쿠 충돌 1년.. 긴장상태 지속〉(9/7)

-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선박 충돌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사건이 발생한 해역 주변에서는 지금도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7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 주변에서는 지금도 많으면 하루 약 50척의 중국 어선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했음.
-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올 들어 센카쿠에서 외국 어선(대부분 중국 어선)이 일본 영해에 침범했다가 퇴거 경고를 받은 건수가 29건에 달했음.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37건에 비해 감소한 것이지만 센카쿠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 9월 이후 퇴거 경고 건수가 300건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하면 언제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해상보안청 간부는 "향후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다"고 말했음. 센카쿠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일본 어민들은 정부가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선박에 단호한 태도



- 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센카쿠 해역에서 어업을 놓고 일본과 중국 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층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 방위성에 따르면 센카쿠 충돌 이후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접근도 급증했음. 작년 4~9월 사이 중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접근은 24차례였으나 센카쿠 충돌 이후인 작년 10월에서 올해 3월 사이엔 72건으로 늘었음.
-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중국 공군 전투기는 지난달 중순 동중국해의 일·중 중간선을 넘어 해상자위대의 정보수집기를 뒤쫓기도 했음. 센카쿠에서는 작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의 어선이 충돌했고, 일본 검찰이 중국 선장 잔치슝(42)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중단 등으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중해 결국 일본 정부는 잔치슝 선장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음. 이는 일본이 '백기를 든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돼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치명적 타격을 받았고 결국 이달 초 총사퇴했음.
- 한편 센카쿠 충돌로 중국의 '영웅'이 됐던 잔치슝 선장은 현재 중국의 자택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아사히신문은 잔치슝 선장이 푸젠성(福建省)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복경찰의 감시하에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고 자유로운 외출도 금지된 상태라고 보도했음. 물론 언론의 취재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잔치슝이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할 경우 국민 여론을 자극해 일본과의 영토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임.

● 노다-원자바오 "국민감정 개선에 노력"(9/7)

-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사태 이후 악화된 양국의 국민감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혜관계를 심화하기로 했음.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6일 오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하기로 했음.
- 이를 위해 양측은 작년 9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상에서의 위기관리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음. 또 내년으로 다가온 국교정상화 40주년에 맞춰 양국 국민 감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일본대지진의 복구 지원, 중국 관광객의 일본 관광 확대 등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음.
- 원자바오 총리는 노다 총리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고, 노다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답변했음.
- 원 총리는 아울러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광범위한 공통이익을 갖고 있다"며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과 건강한 발전이 양국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원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와 일본 내각이 고위층 교류, 각 영역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교류 및 협력, 지역·국제 이슈에서의 밀접한 협력, 전략적 호혜관계 강화 등 양국 간 4대 정치문건의 원칙을 견지해가자"고 주문했음.

● 日 노다 총리, 10월 중국 방문 검토(9/7)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노다 총리가 10월 10일 전후 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며, 후진타오 국가 주석,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노다 총리는 또 양국 간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등과 관련 중국과의 해양 협력도 진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임.
- 원자바오 총리는 6일 노다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노다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답변했음. 중국과 일본은 해마다 정상급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차례임.
-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내년 초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고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당초 연내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희망했으나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가 6월초 퇴진인사를 표명하면서 정상회담 일정이 불투명해졌음.
- 이 신문은 외국 정상을 국빈 초청하는 경우 통상 일왕 주최의 만찬회가 열리며, 이를 준비하는 데는 6개월 정도가 필요해 현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연내 방일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일정을 내년 초 이후로 조율할 것으로 예상됨.

사. 일·러 관계

● "러-日 평화조약 논의서 영토문제 배제돼야"(9/10)

- 러시아는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 논의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을 배제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9일 밝혔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지난 2일 임명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의 취임 축하 전화 통화에서 평화조약 체결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공보실이 언론보도문을 통해 밝혔음.
- 보도문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관련한 논의



- 는 어떤 전제 조건이나 일방적 역사 해석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바탕은 러시아가 남쿠릴열도 영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일본 정치인들의 성명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폭넓은 양자 협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음.
-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일본 지진 피해 복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한 좀 더 긴밀한 조율 활동 등을 포함한 양자 협력을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종전 후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쿠릴열도 문제가 평화조약 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다고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 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귀속됐다고 열도에 대한 주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음.

아. 기 타

● 한·중·일, FTA 산관학 회의서 일부 합의(9/5)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6차 회의에서 경쟁정책 등 일부 규범분야 문안에 3국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통상교섭본부가 5일 밝혔음.
- 통상교섭본부는 "3국은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규범과 협력 분야를 다루는 기타 이슈 분야 초안에 대한 1차 논의를 완료했고, 상품, 서비스, 투자 챕터에 대한 2차 논의와 함께 결론 및 권고 분야에 대한 사전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음.
-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통해 경쟁정책 등 일부 규범 분야는 문안에 사실상 합의했고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등 5개 실무그룹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서 초안 작성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3국은 마지막인 제7차 서울회의에 앞서 내달 중 수석대표 회의를 한차례 더 열기로 했음. 6차 회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국 산·관·학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렸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